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5. 2 통권 제2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권두언 / 남북관계의 '세계화' / 김유남 2

특별기획

스칼라피노 교수와의 대담 / 장달중 4

시사특집

I. 북한의 서방접근과 남북관계의 변화

·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의 변화 / 김영환 30

· 북일수교협상과 남북관계의 변화 / 이유진 36

II. 남북경협과 중·러의 역할

· 남북경협과 중국의 역할 / 이규태 48

· 남북경협과 러시아의 역할 / 고재남 58

연구논단

· 북한의 토지임대제도 연구 / 문준조 66

· 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 / 조동호 83

· 북한의 신무역체제와 남북경협 / 구분학 116

이달의 초심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 조덕송 139

동원다라

1991년 북한 「춘향전」과 50년대식 문화제도 / 김정웅 171

동원경제노트

남북경협 현황과 금후 전망 / 김창권 178

남북관계의 '세계화'

김유남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5년에도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무엇인가 의미있는 변화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진 북미간 제네바합의서가 밝히고 있는 캘린더 일정대로 미국과 북한은 국교정상화로 가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어정쩡한 갈림길에 접근한다는 감이 짙다. 금년은 광복 50년과 분단 50년이 겹치며 그렇기 때문에 반세기의 민족국가 건설과 민족 분열의 역사를 함께 짚어 보아야 하는 뜻 깊은 해이다.

남북관계를 두고 최근에 와서 클로즈업되는 두 쌍의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그 첫째가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와 국제화라는 것이다. '한국화'란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충실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 유관국도 그 기본 룰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화'란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한반도가 위치한 국제 지역사회의 역학관계로 합리적 다자주의 원칙에 충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란 한반도 문제의 유관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현상은 남북관계의 정부당국자 원칙('정부화')과 민간단체 원칙('민간화')이다. 정부화의 논거는 책임질 수 있는 쌍방의 정부차원 협상과 교류만이 건강한 남북관계라는 것이다. 반면 민간화는 미묘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민간기구가 이를 대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강한 남북관계 수립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편의주의대로 필요한 만큼 정부화와 민간화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의 초점은 한반도 및 남북관계의 한국화와 국제화 및 정부화와 민간화를 모두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때마침 정부가 역사적 비준으로 크게 내걸고 있는 '세계화'

는 침체적 십자로에 놓여 있는 남북한 문제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인식이란 '남북관계의 세계화'에 달려 있어 보인다. 정부와 민간 모든 분야에서 세계 속의 한국을 지양하는 발상과 접근방법이 곧 세계화라면, 남북관계도 '세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와 국제화라는 종전의 이분법적 인식기준이 세계화로 격상될 때, 남북관계의 정부화와 민간화라는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차원 높은 글로벌리즘으로 승화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의 세계화'에 있다. 미국과 북한은 이미 세계 속의 남북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교류와 협력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하는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휴전선은 분명히 '국경'이요 남북한은 대등한 국가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카터 전대통령, 미국 상하의원들, 그리고 미국무부 토머스 허바드 부차관보 등이 휴전선을 넘었을 때, 그들은 남북한간의 '국경'을 넘었다고 했다. 미국과 북한은 그러한 인식하에서 국가간 협상을 하고 있어 보인다. 때문에 우리의 대북교류와 협력의 전제조건도 세계 속의 남북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남북관계의 세계화는 혁명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개혁은 분명히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있다. 세계화의 본질은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최고의 선(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민간도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리즘을 찬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후진적 증후군으로 남아있는 분야가 정치 및 남북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남북관계를 보는 우리의 인식만은 아직도 향토주의(로컬리즘)적이거나 아니면 민족주의적이다. 향토주의란 지역정서가 실린 폐쇄적 우월주의로서 세계화내지 글로벌리즘과 대치되는 관념이다. 이러한 남한의 향토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북한은 구제의 대상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족주의란 흥분한 소민족주의에 속한다. 소민족주의로 보면 북한은 통합의 대상이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으로 보면 북한은 분명히 계약과 공존의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북관계의 세계화란 북한을 계약과 공존의 대상으로 하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문제의 본질을 사실 근거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남북관계의 세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긴 과정 끝에 오는 귀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은 남북관계의 세계화(국가간 정상화) 과정을 거친 후 어느 시점에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계약에 의해 통합되는 이익사회(게젤샤프트)를 의미할 것이다.